
		<h1>보도자료</h1> <p>2021. 5. 20.(목) 배포</p>			
<b>2021. 5. 20.(목) 브리핑 시(14:00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5. 20.(목) 브리핑 시(14:00) 보도 가능</b>					
담 당	교육부	고등교육정책과	과장 송근현	서기관 신민영 사무관 우성현	(☎ 044-203-6809) (☎ 044-203-6614)
		국립대학정책과	과장 이강국	사무관 민병성 주무관 이지윤	(☎ 044-203-6808) (☎ 044-203-6496)
		사립대학정책과	과장 송선진	사무관 신소영	(☎ 044-203-6932)
		대학재정장학과	과장 최우성	사무관 김경주 사무관 윤은정	(☎ 044-203-6612) (☎ 044-203-6271)
		전문대학지원과	과장 김 석	사무관 김민하	(☎ 044-203-6972)
		평생학습정책과	과장 이혜진	사무관 유재우	(☎ 044-203-6318)
	KEDI 대학역량진단센터	소장 남신동		(☎ 043-530-9537)	

##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

- ◆ 교육·재정여건 부실 한계대학 집중 관리 및 폐교·청산 절차 체계화
- ◆ 대학별 자율혁신계획(적정 규모화 포함) 수립을 통한 체질개선 촉진
  - 정원 조정 유연화, 재정지원, 규제 혁신 등 촉진기제 제시
- ◆ 공유·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
- ◆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(284개교) 명단 발표

### <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>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'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'을 수립·발표하였다.
-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, 2021년 전국 대학 총원율은 91.4%로, 40,586명 미충원(2021.3 등록률 기준)이 발생하였으며,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※ 2021년 미충원 현황: 총 40,586명 / 비수도권 30,458명(75%), 전문대 24,190명(59.6%)

- 특히,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,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.
  - 이와 함께,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
- ‘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’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.
- ①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  - ② 교육·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,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.
  - ③ 수도권-비수도권 대학, 지역 내 대학, 일반대학-전문대학 등이 개방·공유·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.

## [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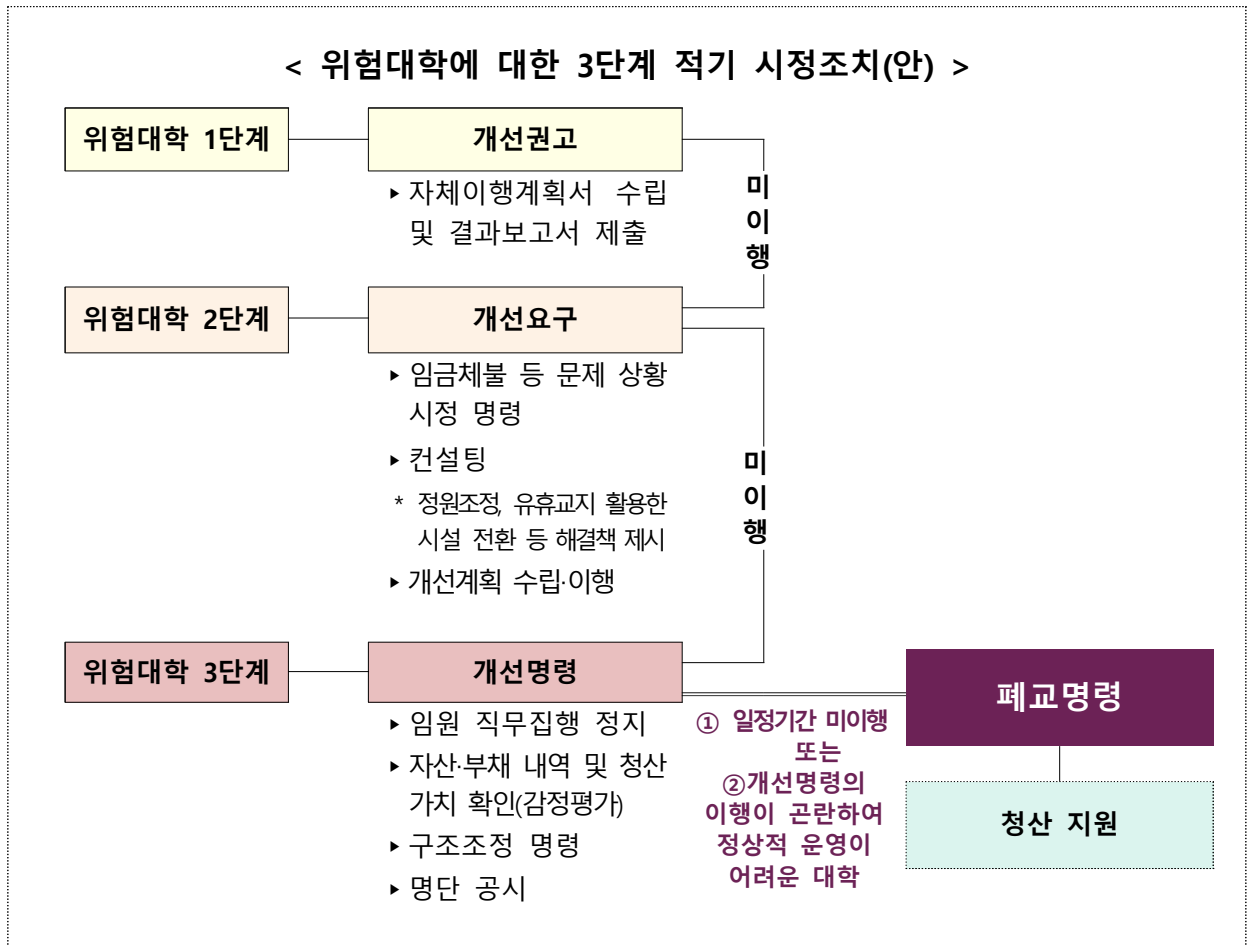
대학 유형	정책방향	
<b>한계대학</b> - 재정지원제한 대학 -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</li> <li>•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</li> <li>•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컨설팅 및 이행점검</li> <li>• 위험대학 관리</li> <li>•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</li> </ul>
<b>자율혁신대학</b> - 일반재정지원 대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적정 규모화,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 수립·추진</li> <li>• 지역 수요,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* 추진 지원</li> </ul> <p>* 연구 중심 대학 지향, 특성화 강화, 평생직업교육강화 등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컨설팅 지원</li> <li>• 유지충원을 점검</li> <li>• 정원 조정 유연화</li> <li>•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전환 지원</li> </ul>

□ 먼저,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, 폐교·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.

-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,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\*하고,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.

\*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핵심 재정지표 분석(2021.하, 세부 지표 확정 예정)

-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(개선권고 → 개선요구 → 개선명령)를 실시하고,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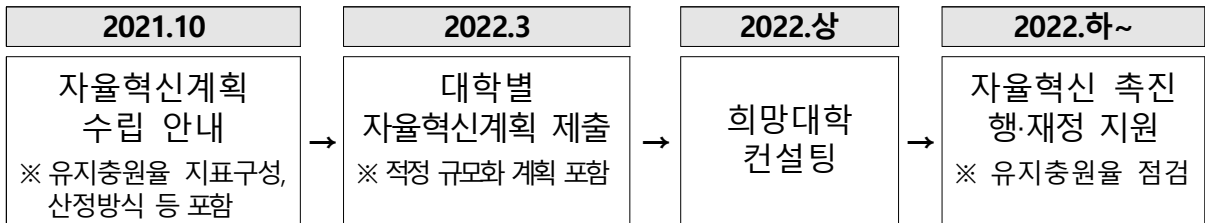


- 원활한 폐교·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,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,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.

- 일반재정지원((전문)대학혁신지원사업)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이 자율 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정원 유연화, 재정지원,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.

①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·추진

<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화 추진과정 >



-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여,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, 발전전략\*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·추진(2022.상~)한다.

\* 연구 중심 대학 지향,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,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

-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유도하고,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.
-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 확대·개편과 연계하여 우수대학에 혜택(인센티브)을 준다.
- 아울러,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(2022.下)하고,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,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.
-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 하며, 신입생·재학생 충원 현황, 지역 간 균형,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검할 계획이다.
- ※ 지역 여건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(약: 30~50%) 설정 예정
- 자율혁신계획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‘(전문)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’을 통해 발표(2021.하)할 예정이다.

## ② 자율혁신 촉진을 위한 정원 조정 유연화

-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-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(2021.하)하고,
  -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유지충원을 점진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.
- 입학정원 일부에 대하여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'모집유보 정원제'도 도입한다.
- 또한,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.

※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우선 도입하고, 향후 사립학교법상 합병 인수 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

### < 정원 조정 유연화 >

- 학부-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
-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
-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
-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

## ③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

-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·개편 하는 한편, 전문대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  - 이와 함께, 성인학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,
  - 재직자 특별전형\*, 시간제 등록제\*\* 등을 확대하고,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유예제도(샌드박스)를 도입할 계획이다.

\* (현행) 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재직자 → (확대) 일반고 졸업생 중 5년 이상 재직자

\*\* 학기당 시간제 등록 가능 학점(현행 12학점) 상한 자율화

## [ 공유·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전략 ]

- 수도권-비수도권 대학, 지역 내 대학, 일반대학-전문대학 등이 개방·공유·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.
-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·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·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,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.
  - 이와 함께,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.
-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\*하고, '지역혁신플랫폼'을 지속적으로 확대(2021. 4개 플랫폼)한다.
  - \*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 구성·운영, 지방대학 정책 관련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제도 도입 등
  -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(2021.하)하여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.
- 대학 간 교육과정, 교원, 시설, 노하우 등 공유·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- 특히,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-비수도권, 일반대학-전문대학 등 협력을 지원(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)하고,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증원 및 공동학과 운영 등을 활성화한다.
- 국립대의 경우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체제(연합대학) 구축을 지원하고,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, 학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## <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 발표 >

- 아울러,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하였다.
  - 이번 명단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(2021.4)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.
    - ※ 한국교원대 및 교육대학 10개교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를 별도 발표(2021.하)
-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I 유형 5개교(일반대학 2개교, 전문대학 3개교), II 유형 13개교(일반대학 7개교, 전문대학 6개교) 등 총 18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,
  -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, 국가장학금, 학자금 대출도 차등 제한된다.

### <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조치 >

구 분		정부 재정지원 사업 (특수 목적 사업)	국가장학금		학자금 대출	
			I 유형	II 유형	일 반	취업 후 상환
재정지원 제한대학	유형 I	(기존) 지원 (신규) 신청 및 지원 제한	-	신·편입생 지원제한	신·편입생 50%제한	-
	유형 II	(기존) 지원 제한 (신규) 신청 및 지원 제한	신·편입생 100% 제한		신·편입생 100% 제한	

- 또한,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12개교(일반대학 11개교, 전문대학 1개교)는 국가장학금,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,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된다.
-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(284개교)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,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·발표할 계획이다.
  - 5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 진단보고서를 접수받고, 6~7월 서면평가 및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.
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”고 밝혔다.
- 아울러, “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, 동반 성장의 고등 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,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- 【붙임】**
1.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방향
  2.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관련 주요 질의답변
  3.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
  4. 2022학년도 신·편입생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가능 대학
  5. 2022학년도 신·편입생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가능 대학
  6.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

**【별첨】**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



비전

지역과 함께,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

목표

- ①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
- ② 부실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
- ③ 개방·공유·협력 기반 동반 성장 지원

전략 및 핵심 과제

대학의 체계적 관리

- 1. 한계대학
  - 과감한 구조개혁
  - 적기 시정조치 및 폐교·청산 절차 체계화
- 2. 자율혁신대학
  -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·추진 (적정 규모화 포함)
  - 정원 조정 유연화
  -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

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

- 1. 고등교육 재정 확충
- 2. 지자체-대학 중심의 지역 협업체계 구축
- 3. 공유·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
- 4. 지역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
  - ※ 국립대 권역별 공동교육혁신체제 등

기본 방향

공유·협력

자율혁신

규제혁신

Q1. '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'을 수립하는 목적은?

- ☞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'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생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.
- '21년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40,586명으로,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, '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※ '21년 미충원 : 총 40,586명 / 비수도권 30,458명(75%), 전문대학 24,190명(59.6%)
- ☞ 지방대학의 질 저하 및 폐교는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, 이는 다시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에,
-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의 위기이며, 더 나아가 지역 경계를 뛰어넘어 국가 경쟁력 및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☞ 이와 함께,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과감한 혁신과 대학 간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.
- ☞ 교육부는 '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'을 통해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개선 및 혁신을 촉진하고, 수도권-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, 공유·협력 기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.

## Q2. 대학의 체계적 관리 기본방향은?

☞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,

- 학령인구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하여 대학이 더욱 속도감 있게 체질을 개선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촉진기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☞ 먼저,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교육·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고, 폐교·청산 절차를 체계화합니다.

- 이를 위해 교육여건을 진단하는 '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'에 추가하여, 핵심 재정지표를 분석하는 '대학 재정진단'을 실시하고, 위기 수준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.

☞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의 경우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, 우수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·외 총량을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, 권역별 유지충원을 점점을 통해 체질 개선 및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.

- 또한, 대학이 유연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을 유연화\*하고,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,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.

\* 학부-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,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,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, 동일범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등

Q3.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방향은?

☞ 대학은 지역 인재양성 및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, 교육부는 국가 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☞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개혁을 지양하고,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촉진·지원한다는 정책기조 하에,

-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진하고,

- 지자체-대학 중심의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, 권역 내 또는 권역 간 대학 협력\*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 간 동반 성장 모델을 확산하고,

\*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, 학생·학점 교류 활성화, 교육교육 공유·협력 등

- 국립대가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☞ 이와 함께, 권역별 유지충원을 점검도 지역 고등교육 여건,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으로,

- 지역별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, 수도권-비수도권 간 균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#### Q4. 자율혁신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?

☞ 이번에 발표한 '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'에서는 자율혁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과 일정을 제시하였으며,

- 구체적인 세부 내용 및 일정은 '21.10월 발표 예정인 '(전문)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'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.

☞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8월 말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, 이 대학들은 '22.3월까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자율혁신계획을 수립·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'22년 하반기에는 권역별 학생 총원 현황, 자율혁신계획상 자체 정원 조정 규모,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유지총원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,

- 권역별 기준 유지총원율을 미충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권고\*가 있을 예정이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.

\* '22년 유지총원율 점검을 통해 '23~'24년 정원 감축 권고

- 또한,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Q5. 정원 외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?

- ☞ 과도한 정원 외 전형 운영으로 인해 대학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혁신계획과 연계하여 정원 내·외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
- ☞ 정원 내·외 총량의 적정 비율은 교원확보율 등 대학별 교육여건, 학생 충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설정할 예정이며,
  -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.

Q6. 정원 조정 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?

☞ 교육부는 대학이 여건 및 역량, 발전전략에 따라 과감한 자율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원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유연화할 계획입니다.

- (학부-대학원 정원 조정 비율 개선)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-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합니다.
- (모집유보 정원제 도입) 자율 정원 감축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유지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 입학정원 모집유보를 허용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를 도입합니다.
- (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)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 전환할 경우 유지충원을 점진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합니다.
- (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) 동일법인 소속인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합니다.

## Q7. 대학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은?

☞ 대학이 학령기 대상 학문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전 생애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, 관련 규제를 혁신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☞ (재정 지원 확대) 일반대학,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확대·개편하고,

- 특히, 전문대학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인재를 양성하고, 지역 수요에 기반하여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

☞ (국가장학금 개선)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
☞ (규제 혁신)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\*, 시간제 등록제\*\* 등을 확대하고,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.

\* (현행) 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재직자 → (확대) 일반고 졸업생 중 5년 이상 재직자

\*\* 학기당 시간제 등록 가능 학점(현행 12학점) 상한 자율화



Q8. 공유·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전략은?

☞ 교육부는 수도권-비수도권 대학, 지역 내 대학, 일반대학-전문대학 등이 개방·공유·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
☞ (고등교육 재정 확충) 국회·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 지원 확대·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, 교육용 기본 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

- 이와 함께,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.

☞ (지역과 연계 강화)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 확대(21. 4개 플랫폼)하고,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\*을 도입하겠습니다.

\*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선정, 최대 6년 간 맞춤형 규제 특례 적용

☞ (공유·협력 활성화) 첨단분야, 교양교육분야 등에서 대학 간 교육과정, 교원, 시설, 노하우 등 공유·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☞ (국립대 혁신) 권역 내 국립대 공동교육혁신체제(연합대학) 구축을 지원하고,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, 학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- ※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, 제2호,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(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대학)
- ※ 한국교원대 및 교육대학 10교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별도 실시하고,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 조치 적용('21.하, 발표 예정)

구분	학교명
<b>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(161교)</b>	가야대학교, 가천대학교, 가톨릭관동대학교, 가톨릭꽃동네대학교, 가톨릭대학교, 강남대학교, 강릉원주대학교, 강원대학교, 건국대학교, 건국대학교(글로벌), 건양대학교, 경기대학교, 경남대학교, 경동대학교, 경북대학교, 경상국립대학교, 경성대학교, 경운대학교, 경일대학교, 경희대학교, 계명대학교, 고려대학교, 고려대학교(세종), 고신대학교, 공주대학교, 광운대학교, 광주대학교, 광주여자대학교, 국민대학교, 군산대학교, 극동대학교, 금오공과대학교, 김천대학교, 나사렛대학교, 남부대학교, 남서울대학교, 단국대학교, 대구가톨릭대학교, 대구대학교, 대구한의대학교, 대신대학교, 대전대학교, 대전대학교, 덕성여자대학교, 동국대학교, 동국대학교(경주), 동덕여자대학교, 동명대학교, 동서대학교, 동신대학교, 동아대학교, 동양대학교, 동의대학교, 루터대학교, 명지대학교, 목원대학교, 목포가톨릭대학교, 목포대학교, 목포해양대학교, 배재대학교, 백석대학교, 부경대학교, 부산가톨릭대학교, 부산대학교, 부산외국어대학교, 부산장신대학교, 삼육대학교, 상명대학교, 상지대학교, 서강대학교, 서경대학교, 서울과학기술대학교, 서울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서울신학대학교, 서울여자대학교, 서원대학교, 선문대학교, 성결대학교, 성공회대학교, 성균관대학교, 성신여자대학교, 세명대학교, 세종대학교, 세한대학교, 송원대학교, 수원대학교, 숙명여자대학교, 순천대학교, 순천향대학교, 송실대학교, 신라대학교, 신한대학교, 아주대학교, 안동대학교, 안양대학교, 연세대학교, 연세대학교(미래), 영남대학교, 영산대학교, 예수대학교, 용인대학교, 우석대학교, 우송대학교, 울산대학교, 원광대학교, 위덕대학교, 유원대학교, 을지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, 인제대학교, 인천가톨릭대학교, 인천대학교, 인하대학교, 전남대학교, 전북대학교, 전주대학교, 제주대학교, 조선대학교, 중부대학교, 중앙대학교, 중원대학교, 차의과학대학교, 창신대학교, 창원대학교, 청운대학교, 청주대학교, 초당대학교, 총신대학교, 추계예술대학교, 충남대학교, 충북대학교, 케이씨대학교, 평택대학교, 포항공과대학교, 한경대학교, 한국교통대학교, 한국기술교육대학교, 한국산업기술대학교, 한국성서대학교, 한국외국어대학교, 한국체육대학교, 한국항공대학교, 한국해양대학교, 한남대학교, 한동대학교, 한라대학교, 한림대학교, 한밭대학교,

	한서대학교, 한성대학교, 한세대학교, 한신대학교, 한양대학교, 한양대학교(ERICA), 한일장신대학교, 협성대학교, 호남대학교, 호서대학교, 호원대학교, 흥익대학교
<b>전문대학 (123교)</b>	가톨릭상지대학교, 강동대학교, 강릉영동대학교, 강원도립대학교, 거제대학교, 경기과학기술대학교, 경남도립거창대학, 경남도립남해대학, 경남정보대학교, 경민대학교, 경북대학교, 경북과학대학교, 경북도립대학교, 경북보건대학교, 경북전문대학교, 경인여자대학교, 계명문화대학교, 계원예술대학교, 광주보건대학교, 구미대학교, 국제대학교, 군산간호대학교, 군장대학교, 기독간호대학교, 김포대학교, 김해대학교, 농협대학교, 대경대학교, 대구공업대학교, 대구과학대학교, 대구보건대학교, 대동대학교, 대림대학교, 대원대학교, 대전과학기술대학교, 대전보건대학교, 동강대학교, 동남보건대학교, 동서울대학교, 동아방송예술대학교, 동아보건대학교, 동양미래대학교, 동원과학기술대학교, 동원대학교, 동의과학대학교, 동주대학교, 마산대학교, 명지전문대학, 목포과학대학교, 문경대학교, 배화여자대학교, 백석문화대학교, 부산경상대학교, 부산여자대학교, 부산예술대학교, 부천대학교, 삼육보건대학교, 서영대학교, 서울여자간호대학교, 서울예술대학교, 서일대학교, 서정대학교, 선린대학교, 성운대학교, 세경대학교, 송곡대학교, 송호대학교, 수성대학교, 수원과학대학교, 수원여자대학교, 순천제일대학교, 송의여자대학교, 신구대학교, 신성대학교, 신안산대학교, 아주자동차대학, 안동과학대학교, 안산대학교, 여주대학교, 연성대학교, 연암공과대학교, 연암대학교, 영남이공대학교, 영진전문대학교, 오산대학교, 용인송담대학교, 우송정보대학, 울산과학대학교, 원광보건대학교, 유한대학교, 인덕대학교, 인천재능대학교, 인하공업전문대학, 장안대학교, 전남과학대학교, 전남도립대학교, 전북과학대학교, 전주기전대학, 전주비전대학교, 제주관광대학교, 제주한라대학교, 조선간호대학교, 조선이공대학교, 진주보건대학교, 창원문성대학교, 청강문화산업대학교, 청암대학교, 춘해보건대학교, 충남도립대학교, 충북도립대학교, 충북보건과학대학교, 충청대학교, 포항대학교, 한국골프대학교, 한국관광대학교, 한국복지대학교, 한국승강기대학교, 한국영상대학교, 한림성심대학교, 한양여자대학교, 한영대학교, 혜전대학교, 호산대학교

\* 대학명은 가나다순임

※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, 제2호,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

❖ 국가장학금 I 유형(학생직접지원형) :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

구분	학교명
<p><b>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(179교)</b></p>	<p>가야대학교, 가천대학교, 가톨릭관동대학교, 가톨릭꽃동네대학교, 가톨릭대학교, 감리교신학대학교, 강남대학교, 강릉원주대학교, 강원대학교, 건국대학교, 건국대학교(글로벌), 건양대학교, 경기대학교, 경남대학교, 경동대학교, 경북대학교, 경상국립대학교, 경성대학교, 경운대학교, 경일대학교, 경희대학교, 계명대학교, 고려대학교, 고려대학교(세종), 고신대학교, 공주대학교, 광신대학교, 광운대학교, 광주가톨릭대학교, 광주대학교, 광주여자대학교, 국민대학교, 군산대학교, 극동대학교, 금오공과대학교, 김천대학교, 나사렛대학교, 남부대학교, 남서울대학교, 단국대학교, 대구가톨릭대학교, 대구대학교, 대구한의대학교, 대신대학교, 대전가톨릭대학교, 대전대학교, 대전신학대학교, 대진대학교, 덕성여자대학교, 동국대학교, 동국대학교(경주), 동덕여자대학교, 동명대학교, 동서대학교, 동신대학교, 동아대학교, 동양대학교, 동의대학교, 루터대학교, 명지대학교, 목원대학교, 목포가톨릭대학교, 목포대학교, 목포해양대학교, 배재대학교, 백석대학교, 부경대학교, 부산가톨릭대학교, 부산대학교, 부산외국어대학교, 부산장신대학교, 삼육대학교, 상명대학교, 상지대학교, 서강대학교, 서경대학교, 서울과학기술대학교, 서울기독교대학교, 서울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서울신학대학교, 서울여자대학교, 서울장신대학교, 서울한영대학교, 서원대학교, 선문대학교, 성결대학교, 성공회대학교, 성균관대학교, 성신여자대학교, 세명대학교, 세종대학교, 세한대학교, 송원대학교, 수원가톨릭대학교, 수원대학교, 숙명여자대학교, 순천대학교, 순천향대학교, 송실대학교, 신라대학교, 신한대학교,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, 아주대학교, 안동대학교, 안양대학교, 연세대학교, 연세대학교(미래), 영남대학교, 영남신학대학교, 영산대학교, 영산선학대학교, 예수대학교, 예원예술대학교, 용인대학교, 우석대학교, 우송대학교, 울산대학교, 원광대학교, 위덕대학교, 유원대학교, 을지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, 인제대학교, 인천가톨릭대학교, 인천대학교, 인하대학교, 장로회신학대학교, 전남대학교, 전북대학교, 전주대학교, 제주대학교, 조선대학교, 중부대학교, 중앙대학교, 중앙승가대학교, 중원대학교, 차의과학대학교, 창신대학교, 창원대학교, 청운대학교, 청주대학교, 초당대학교, 총신대학교, 추계예술대학교, 충남대학교, 충북대학교, 칼빈대학교, 케이씨대학교, 평택대학교, 포항공과대학교, 한경대학교, 한국교통대학교, 한국기술교육대학교, 한국산업기술대학교, 한국성서대학교, 한국외국어대학교, 한국체육대학교, 한국침례신학대학교, 한국향</p>

	공대학교, 한국해양대학교, 한남대학교, 한동대학교, 한라대학교, 한림대학교, 한밭대학교, 한서대학교, 한성대학교, 한세대학교, 한신대학교, 한양대학교, 한양대학교(ERICA), 한일장신대학교, 협성대학교, 호남대학교, 호남신학대학교, 호서대학교, 호원대학교, 흥익대학교
<b>전문대학 (127교)</b>	가톨릭상지대학교, 강동대학교, 강릉영동대학교, 강원도립대학교, 거제대학교, 경기과학기술대학교, 경남도립거창대학, 경남도립남해대학, 경남정보대학교, 경민대학교, 경북대학교, 경북과학대학교, 경북도립대학교, 경북보건대학교, 경북전문대학교, 경인여자대학교, 계명문화대학교, 계원예술대학교, 광주보건대학교, 구미대학교, 국제대학교, 군산간호대학교, 군장대학교, 기독교간호대학교, 김포대학교, 김해대학교, 농협대학교, 대경대학교, 대구공업대학교, 대구과학대학교, 대구보건대학교, 대동대학교, 대림대학교, 대원대학교, 대전과학기술대학교, 대전보건대학교, 동강대학교, 동남보건대학교, 동서울대학교, 동아방송예술대학교, 동아보건대학교, 동양미래대학교, 동원과학기술대학교, 동원대학교, 동의과학대학교, 동주대학교, 두원공과대학교, 마산대학교, 명지전문대학, 목포과학대학교, 문경대학교, 배화여자대학교, 백석문화대학교, 백제예술대학교, 부산경상대학교, 부산과학기술대학교, 부산여자대학교, 부산예술대학교, 부천대학교, 삼육보건대학교, 서라벌대학교, 서영대학교, 서울여자간호대학교, 서울예술대학교, 서일대학교, 서정대학교, 선린대학교, 성운대학교, 세경대학교, 송곡대학교, 송호대학교, 수성대학교, 수원과학대학교, 수원여자대학교, 순천제일대학교, 송의여자대학교, 신구대학교, 신성대학교, 신안산대학교, 아주자동차대학, 안동과학대학교, 안산대학교, 여주대학교, 연성대학교, 연암공과대학교, 연암대학교, 영남이공대학교, 영진전문대학교, 오산대학교, 용인송담대학교, 우송정보대학, 울산과학대학교, 원광보건대학교, 유한대학교, 인덕대학교, 인천재능대학교, 인하공업전문대학, 장안대학교, 전남과학대학교, 전남도립대학교, 전북과학대학교, 전주기전대학, 전주비전대학교, 제주관광대학교, 제주한라대학교, 조선간호대학교, 조선이공대학교, 진주보건대학교, 창원문성대학교, 청강문화산업대학교, 청암대학교, 춘해보건대학교, 충남도립대학교, 충북도립대학교, 충북보건과학대학교, 충청대학교, 포항대학교, 한국골프대학교, 한국관광대학교, 한국복지대학교, 한국승강기대학교, 한국영상대학교, 한림성심대학교, 한양여자대학교, 한영대학교, 혜전대학교, 호산대학교

\* 대학명은 가나다순임

## 붙임5

## 2022학년도 신입입생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 가능대학

※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, 제2호,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

❖ 국가장학금 II 유형(대학연계지원형) : 등록금 동결·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

구분	학교명
<b>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(176교)</b>	가야대학교, 가천대학교, 가톨릭관동대학교, 가톨릭꽃동네대학교, 가톨릭대학교, 감리교신학대학교, 강남대학교, 강릉원주대학교, 강원대학교, 건국대학교, 건국대학교(글로벌), 건양대학교, 경기대학교, 경남대학교, 경동대학교, 경북대학교, 경상국립대학교, 경성대학교, 경운대학교, 경일대학교, 경희대학교, 계명대학교, 고려대학교, 고려대학교(세종), 고신대학교, 공주대학교, 광신대학교, 광운대학교, 광주가톨릭대학교, 광주대학교, 광주여자대학교, 국민대학교, 군산대학교, 극동대학교, 금오공과대학교, 김천대학교, 나사렛대학교, 남부대학교, 남서울대학교, 단국대학교, 대구가톨릭대학교, 대구대학교, 대구한의대학교, 대신대학교, 대전가톨릭대학교, 대전대학교, 대전신학대학교, 대진대학교, 덕성여자대학교, 동국대학교, 동국대학교(경주), 동덕여자대학교, 동명대학교, 동서대학교, 동신대학교, 동아대학교, 동양대학교, 동의대학교, 루터대학교, 명지대학교, 목원대학교, 목포가톨릭대학교, 목포대학교, 목포해양대학교, 배재대학교, 백석대학교, 부경대학교, 부산가톨릭대학교, 부산대학교, 부산외국어대학교, 부산장신대학교, 삼육대학교, 상명대학교, 서강대학교, 서경대학교, 서울과학기술대학교, 서울대학교, 서울시립대학교, 서울신학대학교, 서울여자대학교, 서울장신대학교, 서울한영대학교, 서원대학교, 선문대학교, 성결대학교, 성공회대학교, 성균관대학교, 성신여자대학교, 세명대학교, 세종대학교, 세한대학교, 송원대학교, 수원가톨릭대학교, 수원대학교, 숙명여자대학교, 순천대학교, 순천향대학교, 숭실대학교, 신라대학교, 신한대학교,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, 아주대학교, 안동대학교, 안양대학교, 연세대학교, 연세대학교(미래), 영남대학교, 영남신학대학교, 영산대학교, 영산선학대학교, 예수대학교, 용인대학교, 우석대학교, 우송대학교, 울산대학교, 원광대학교, 위덕대학교, 유원대학교, 을지대학교, 이화여자대학교, 인제대학교, 인천가톨릭대학교, 인천대학교, 인하대학교, 장로회신학대학교, 전남대학교, 전북대학교, 전주대학교, 제주대학교, 조선대학교, 중부대학교, 중앙대학교, 중앙승가대학교, 중원대학교, 차의과학대학교, 창신대학교, 창원대학교, 청운대학교, 청주대학교, 초당대학교, 총신대학교, 추계예술대학교, 충남대학교, 충북대학교, 칼빈대학교, 케이씨대학교, 평택대학교, 포항공과대학교, 한경대학교, 한국교통대학교, 한국기술교육대학교, 한국산업기술대학교, 한국성서대학교, 한국외국어대학교, 한국체육대학교, 한국

	<p>침례신학대학교, 한국항공대학교, 한국해양대학교, 한남대학교, 한동대학교, 한라대학교, 한림대학교, 한밭대학교, 한서대학교, 한성대학교, 한세대학교, 한신대학교, 한양대학교, 한양대학교(ERICA), 한일장신대학교, 협성대학교, 호남대학교, 호남신학대학교, 호서대학교, 호원대학교, 홍익대학교</p>
<p><b>전문대학 (124교)</b></p>	<p>가톨릭상지대학교, 강동대학교, 강릉영동대학교, 강원도립대학교, 거제대학교, 경기과학기술대학교, 경남도립거창대학, 경남도립남해대학, 경남정보대학교, 경민대학교, 경북대학교, 경북과학대학교, 경북도립대학교, 경북보건대학교, 경북전문대학교, 경인여자대학교, 계명문화대학교, 계원예술대학교, 광주보건대학교, 구미대학교, 국제대학교, 군산간호대학교, 군장대학교, 기독교간호대학교, 김포대학교, 김해대학교, 농협대학교, 대경대학교, 대구공업대학교, 대구과학대학교, 대구보건대학교, 대동대학교, 대림대학교, 대원대학교, 대전과학기술대학교, 대전보건대학교, 동강대학교, 동남보건대학교, 동서울대학교, 동아방송예술대학교, 동아보건대학교, 동양미래대학교, 동원과학기술대학교, 동원대학교, 동의과학대학교, 동주대학교, 마산대학교, 명지전문대학, 목포과학대학교, 문경대학교, 배화여자대학교, 백석문화대학교, 백제예술대학교, 부산경상대학교, 부산여자대학교, 부산예술대학교, 부천대학교, 삼육보건대학교, 서영대학교, 서울여자간호대학교, 서울예술대학교, 서일대학교, 서정대학교, 선린대학교, 성운대학교, 세경대학교, 송곡대학교, 송호대학교, 수성대학교, 수원과학대학교, 수원여자대학교, 순천제일대학교, 송의여자대학교, 신구대학교, 신성대학교, 신안산대학교, 아주자동차대학, 안동과학대학교, 안산대학교, 여주대학교, 연성대학교, 연암공과대학교, 연암대학교, 영남이공대학교, 영진전문대학교, 오산대학교, 용인송담대학교, 우송정보대학, 울산과학대학교, 원광보건대학교, 유한대학교, 인덕대학교, 인천재능대학교, 인하공업전문대학, 장안대학교, 전남과학대학교, 전남도립대학교, 전북과학대학교, 전주기전대학, 전주비전대학교, 제주관광대학교, 제주한라대학교, 조선간호대학교, 조선이공대학교, 진주보건대학교, 창원문성대학교, 청강문화산업대학교, 청암대학교, 춘해보건대학교, 충남도립대학교, 충북도립대학교, 충북보건과학대학교, 충청대학교, 포항대학교, 한국골프대학교, 한국관광대학교, 한국복지대학교, 한국승강기대학교, 한국영상대학교, 한림성심대학교, 한양여자대학교, 한영대학교, 혜전대학교, 호산대학교</p>

\* 대학명은 가나다순임

구분(제한 범위)		학 교 명
일반대학 (9교)	일반상환 50% 제한 (2개교)	서울기독대학교, 예원예술대학교
	일반상환· 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7개교)	경주대학교, 금강대학교, 대구예술대학교, 신경대학교, 제주국제대학교, 한국국제대학교, 한려대학교
전문대학 (9개교)	일반상환 50% 제한 (3개교)	두원공과대학교, 부산과학기술대학교, 서라벌대학교
	일반상환· 취업 후 상환 100% 제한 (6개교)	강원관광대학교, 고구려대학교, 광양보건대학교, 대덕대학교, 영남외국어대학, 웅지세무대학교

\* 대학명은 가나다순임